부산지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이제 겨우 한숨을 돌렸을 뿐 방심해서는 결코 안 된다.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서민경제 활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 부산시는 기존 격주 금요일마다 시행하던 민·관 합동 방역의 날을 매주 금요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부산시청 구내식당에 칸막이를 설치한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해당하는 371억 원은 구·군에서 부담한다.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하고 있다.
※ 문의 : 소상공인지원팀(051-888-4784)

부산시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한 '3대 부담' 경감 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특례자금과 지방세 유예 등의 지원 대책에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민생대책이다. ※ 문의 : 혁신경제과(051-888-7714)

부산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 소유 공유재산과 공공시설에 대해 3개월간 매월 50%씩 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이다. 지하도상가·자갈치시장·금강공원·어린이대공원·부산시민공원·농산물도매시장·국제수산물유통관리사업소 등 3천755개 상가에 73억 원 규모다.

기존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은 더욱 장려한다. 3개월 이상 10% 이상의 임대료를 할인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50% 감면(최대 200만 원 한도)하는 '착한 상가형'과 임차인과 5년 동안 임대료 동결 협약을 맺은 건물주의 재산세 전액을 지원(200만 원 한도)하는 '안심 상가형'으로 나눠 시행한다. 임대료를 인하하는 전통시장은 단위 사업별로 4천만 원 이내에서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

동백전 캐시백 10% 연장·제로페이 활성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 부족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자금 지원도 신설·확대한다. 기존 4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자금'과 지난 2월 신설한 1천억 원의 '부산모두론'에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500억 원), '소기업 경영안정자금'(500억 원)을 각각 신설해 7천억 원 규모로 특별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은 업체당 최대 1억 원, 금리 1.6~2.5%대로 대출할 수 있다. 500억 원 규모의 '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4억 원, 금리 0~3%대로 대출해준다. 이 상품은 중복 대출도 가능하다. 기존 정책자금 지원조건은 문턱을 낮춰 자동차 부품기업 특례보증은 기존 B- 등급 이상에서 CCC 등급 이상까지 확대한다.

부산시는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수입감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지원은 강화한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동백전 발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3천억 원대로 발행하기로 한 동백전을 1조 원까지 늘리고, 3월 말까지였던 10% 캐시백을 4월 이후에도 연장하기로 했다(연장 기한과 한도 금액은 추후 공지). 이와 함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의 업무추진비, 급량비 등 현금성 지출 예산에 '기업제로페이'를 도입한다. 3월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시와 사업소에 이어 구·군, 시 산하 공기업 등에도 도입을 추진한다. 〈〈〈관련 기사 12면

부산시, 빈틈없는 방역 시스템 가동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침체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부산 클린존'(Clean Zone)을 확대한다. '부산 클린존'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상점·공공시설 가운데 보건소와 전문방역업체가 철저히 방역해 바이러스 청정구역임을 인증한 곳이다. 해당 시설과 업체에서 원할 경우 인증마크를 부착한다. 〈〈〈관련 기사 6~7면

부산시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지역 의료 시스템을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집중해 투입하는 등 빈틈없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한풀 꺾였으나 지역 내 소규모 집단에 의한 감염은 안심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다. 초기의 코로나19 대응이 '감염자 발견'에 무게를 뒀다면,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감염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치료 체계를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경증 환자는 부산의료원에서 중증 환자는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전담하도록 했다. 부산의료원은 '격리'에 중점을 두고 경증 환자 중심으로 수용하고, 감염내과 전문의 등 의료 자원을 충분히 갖춘 대학병원은 '치료'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차량 이동식(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확대 운영하고 있다. 차량 이동식 선별진료소는 '안내→문진표 작성→검체 채취→주의 사항 전달' 등 4단계 순서로 이뤄져 있어 검사를 마치는 데까지 불과 5~6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지역 내 차량 이동식 선별진료소는 현재 북구와 부산진구, 해운대구 등에서 운영 중이다.

부산시는 기존 격주 금요일마다 시행하던 민·관 합동 방역의 날을 매주 금요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방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뿐만 아니라 경로당, 버스정류장, 전통시장 등 코로나19 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까지 방역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 동선과 주변 시설에 대한 특별방역 소독을 매일 800~1천여 회 실시하고 있으며, 확진자 동선별 방역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24시간 운영

부산시는 고위험 사업장도 집중관리하고 있다. 지난 3월 12일부터 27일까지를 고위험 사업장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컨택센터(콜센터) 148개, 노래방 1천884개, 피시방 995개, 학원 625개, 교습소 277개 등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을 강화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심리지원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문의 : 1577-0199)와 구·군 센터는 정신과 상담 전문인력 215명이 코로나19 심리 상담에 나서고 있다.

조민제_jominje@korea.kr